

목포시건축물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13
----------	-----

1. 조례제정의 배경

- 장애인편의시설은 건축의 허가·준공 등의 과정은 시설주관기관이나 소속공무원, 건축사만이 대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 이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 청원으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2. 주민청원요약(일지)

- 청 원 자 : 목포시 옥암동 967 - 16 허 주 현
- 서명인수 : 5,986명(유효서명 4,708, 무효서명 1,278)
- 주민청원 조례제정 청구 : 5. 23
- 서명요청 및 서명기간 : 6. 3 ~ 6. 25
- 주민청구 취지 공포 : 7. 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8. 25
- 조례안 시의회 부의 요구 : 9. 4

3. 제정목적

-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있어서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사전점검대상(안 제3조) : 국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시설
- 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안 제4조) : 장애인단체 및 시설, 시민단체 등으로 10명 이내 2년
-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안 제 9조) :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반영

5. 조례제정에 대한 목포시의 종합의견 요약 : 별첨 3 참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내 → 상위법 미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22조 규정에 편의시설의 설치 등 지도감독은 소속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만이 대행으로 규정
- 따라서, 본 조례 내용상 점검요원(안 제3 ~ 5조)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편의시설의 시설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 주관기관이 그 점검 결과에 기속을 받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위법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음.

6. 타 시군 제정 등 기타사항

- 준칙여부 : 없음
- 타 시군 제정 사항 : 없음.
- ※ 우리시가 전국 최초임.

7. 종합의견

- 본 조례 안을 청구한 대표자 등 관련자들과 목포시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후 이러한 사항이 해결된 후 처리코자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 조정치 못함.
- 조례를 제정 요구한 목포시에서도 제정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준칙, 타 시군 사례도 없는 전국최초의 조례인 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청취 협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정하여야겠기에 이를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